



# ‘집단에너지 활성화’ 고유가 대응체재구축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정책간담회

## 강연문 요지

### 국가적 에너지효율 극대화 노력 당부

최근 국제유가가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 핵문제 관련 긴장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위기 대응체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05년말 81%)가 높아 이란 핵문제의 전개방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고유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공급차원에서의 각종 노력과 더불어 수요차원의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방분야에 있어서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보급의 활성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활성화 계획 수립 차원에서 내년부터 향후 5개년간 적용될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참여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역난방 요금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요금조정 결과의 적용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료비연동제의 주기단축을 검토하는 한편, 고정비 상한제의 조정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협회를 비롯한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러한 성과가 우리나라 고유가 대응 체질강화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1. 고유가의 지속은 마침내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 -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계 강화에 나일 것

- 그간 여러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원 다변화(석유비중 : 1990년 53.8%→2004년 45.6%), 정부비축유 확보(74.5백만B)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2005),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운영 등 참여정부 들어 에너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충과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고유가, 국제환경 규제 등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에너지의 자주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0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추진,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원유 자주개발을 확대(2005년 4.1%→2008년 10%)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석유공사법 개정추진, 유전개발펀드출시(2천억원 규모)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또한 수소 경제 이행촉진법 제정 추진,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 작성 및 연료전지 실증사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여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 에너지 해외의존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2005~2007)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2. 에너지 안보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수준의 중장기 전략과 마스터플랜은?

### 에너지자원 인프라 구축, 에너지안보강화에 더 한층 노력할 터

- 장기수요에 부응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 석유의존도 대폭 축소, 원전 및 석탄의 적정비중 유지, 가스·신재생 및 비재래 화석에너지의 지속 확대해 나가고
- ※ 원전에 대해서는 향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활용방안 확정
- 전략적 자원외교를 통하여 민간의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할 것이며
- ※ 17개 자원부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방안 발굴 및 민간의 노력 지원을 통한 자주 개발비율 대폭 향상
- 비상시 수급차질에 부응하는 에너지안보 강화에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하기 위하여
- 에너지 이용효율이 미흡한 수송, 가정부문 효율정책 강화
- 기술개발확대를 통한 에너지이용효율성 향상 및 상업화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 에너지자원 인프라 확충
- 국가에너지위원회 중심의 에너지자원정책 시스템 구축하고
- 에너지자원 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하며
- 에너지복지 강화 및 사회양극화 해소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3. 효과적인 해외자원개발과 대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 향후 전망을

### 해외자원개발 선도할 전문기업 육성 필요

-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본·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자주개발 확충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을 선도할 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두 차례의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하루 30만배럴의 생산역량을 보유한 지역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키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선 석유공사를 지역 메이저급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1단계로 생산역량 15만b/d, 자산규모 3~4조원 규모의 전문공기업으로 육성하고,
- 2단계로 생산역량 30만b/d 규모의 지역 메이저급 한국형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임
- 특히, 석유공사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출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나,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 석유공사가 일정규모(일일 15만 배럴 생산) 이상으로 성장하여 해외 메이저 기업과 경제여건이 확보되면 개발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에너지 관련 공기업(예 : 한전, 가스공사 등)의 출자,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예산, 조직, 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2005년에는 미래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의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 3년간 1.1조원 투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습니다.
- 올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 4,095억원을 투자하여(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2.5배 증가), R&D 및 보급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연료전기 실증사업 추진, 국민임대아파트 1,600호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바이오디젤(BD5)의 전국보급,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인 강원풍력 완공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 고유가와 함께 에너지시장의 다원화와 경쟁심화, 소비자의 욕구 고조 및 다양화 등 대내외적 집단에너지산업의 위협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은?

#### 집단에너지사업자 내실화로 안정기반 강화에 나아가야

- 지금까지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있다고 여겨졌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년간 적극적으로 보급에 앞장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고 사업여건도 과거와 달리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하에서, 정부의 보급정책에 따른 보호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
-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사업 확장에 몰입해 왔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이론적 뒷받침 하에 사업을 내실화하여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도 시대적인 여건 변화와 경쟁의 가속화 등 집단에너지시장에서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을 새로 짜는 등 집단에너지사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5. CES 사업 현황 및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

- 현재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는 8개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가 나갔으며, 사당지구의 케너텍 1개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중에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 8개 사업자 : 케너텍(사당지구), 대구도시가스(죽곡지구), 대한주택공사(아산배방지구), 경기CES(양주고읍지구), 대한도시가스(강인지구), 중부도시가스(천안청수지구), 서울도시가스(고양관광문화단지),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 현 전기사업법에서는 특정 공급구역 전력수요 70%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보토록하고 있어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저하로 인한 보급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제기되어,
-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구역전기사업 적용기준을 완화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CES 사업자의 사업 관련 인·허가와 관련한 중복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법 상으로는 구역형집단에너지의 별도 구분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공급기본계획의 수립결과를 반영하여 CES 보급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ECO**